

기본을 바로 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국 무 조 정 실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전화 (02)732-2753/ 전송 (02)732-9132
일반행정심의관실 과장 / 김효명 사무관 / 이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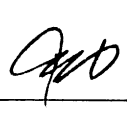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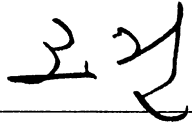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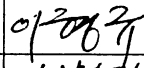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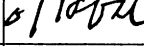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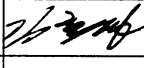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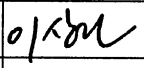
문서번호 국무총괄 15200 - 60

시행일자 2003. 5. 13.

경 유

수 신 받는 곳 참조

참 조

| | | | |
|------|--|---|---|
| 보존기간 | | 국무조정실장 | 국 무 총 리 |
| 공개여부 | |  |  |
| 조정관 |  | | |
| 심의관 |  | | |
| 과 장 |  | | |
| | | | |
| 기안자 |  | | 협조 |
| 심사자 | | 심 사 일 | |

제 목 : 화물연대 집단행동 대처 정부비상대책 실행 철저(국무총리지시 제2003-5호)

1. 그동안 정부가 화물운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러한 노력이 무산됨에 따라, 정부는 5월 12일(월)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대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상대책 추진을 지시하니 관계부처에서는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국가 운송위기가 조기에 극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화물비상수송대책의 즉각 실행

- 화물연대 불참 영업용차량이 자유롭게 운송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마다 경찰력을 배치하고, 화물연대 회원들의 운송방해 행위시에는 이들을 즉각 사법 처리토록 할 것
- 화주보유 자가용 화물차량을 화주간 공동으로 이용토록 하고 자가용 화물차량의 유상운송을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지속할 것

- 국방부는 해양수산부와 유기적인 공조체제하에 군 장비와 군 인력을 가장 긴급하고 효율적인 곳에 투입토록 할 것
- 장관급이 현지에 내려가 화물운송사 사장단회의를 소집하고 점검·격려·독려함으로써 실질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것
-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철도청, 부산광역시, 부산시 화물연합회 등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1일 물동량 처리 목표를 세워 목표관리에 들어가고, 그 결과를 일보로 총리에게 보고하는 한편, 관계부처가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
-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은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3대 물류거점 현장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할 것

나. 공권력 행사

- 항만, 컨테이너기지, 부두, 트럭터미널, 시설, 주요IC 등에 경찰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화물운송방해 행위자를 엄단하고, 필요한 경우 화물 차량에 무장경찰을 동승시켜 운송방해 행위를 차단할 것
- 부두 등 집단행동자 밀집지역에 경찰력 투입 시, 전국적인 동시 반발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방송매체 등에 협조를 구하여 시민불편의 최소화에 노력할 것

다. 정부종합상황실 운영 철저

- 행정자치부내에 설치된 정부종합상황실의 운영 수준을 실질적인 상황실 수준으로 즉시 가동시킬 것
- 관계부처의 장은 필요한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명령을 내릴 것
- 종합상황실은 필요한 경우, 즉시 관계부처 주요 간부회의 소집 명령을 내려 상황에 긴급 대처하도록 할 것

라. 대화의 노력은 계속진행

- 대화로 타결노력을 하려는 화물연대 대표나 회원들과는 대화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
- 대화창구는 미리 공지해 놓음으로써 화물연대 회원들이 자유롭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것. <끝>

국 무 총 리

받는 곳 : 가 23~31 가 41~58, 가 71~86, 나 02